문화재 지정번호 폐지…각계 의견 '분분'

오랜 국보·보물 서열화 지적에
지정번호 폐지…11월19일 시행

동일名 문화재, 보물만 108건
"지정년도 병기해 구분" 고시
학계 "연구 불편해 번호 용이"
단체 "환영하나 표기 어려워"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에 전시된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1962-1)·(1962-2)의 모습. 앞으로는 78·83호 대신 이 같이 표기된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사용하던 지정번호가 사라진다. 1962년 지정번호제 시행 이후 5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동일명 문화재 표기 문제 등 개선해야 할 숙제는 적지 않아 보인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이 개정·공포됐다"고 11월 19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국가등록문화재를 표기할 때 지정시 부여된 번호(지정번호)를 표기하지 않도록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국보 제1호 숭례문은 앞으로 '국보 숭례문'으로 표기가 변경된다.

숭례문VS훈민정음 '1호 논쟁'

1962년 시행된 문화재 지정번호제도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로,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 국보 1호 논쟁은 1995년부터 시작됐다. 지정번호제도가 일제가 지정한 문화재 순번을 그대로 지정했으며,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 상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국보 1호 대체 문화재로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것은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이었지만 더 좋은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재지정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지정번호 폐지에 대해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문화재 서열화 논란이 해소될 뿐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와 근현대유산 등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로도 외연이 확장될 것"이라며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신청서나 신고서 등의 서식이 간소화돼 문화재 행정 편의를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일명 문화재 표기 어떻게?

하지만, 문화재 행정과 연구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일명 문화재다. 지정번호 폐지에 따른 혼동을 줄이고자 국보 제78·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애칭을 공모했던 국립중앙박물관의 국민공모사업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사 결과, 동일명 불교문화재는 국보 7건·보물 108건에 달한다. 주로 금동불입상 등 출처가 불분명한 불상과 〈금강반야바라밀경〉과 같은 동일한 명칭의 불경류가 대부분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혼선을 막기 위해 11월 19일 고시를 통해 동일명 문화재의 경우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년도를 표기하는 방침을 제시했다. 지정년도마저 같다면 지정순서를 표기키로 했다. 일례로 국보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은 제78·83·118호가 있다. 지정번호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금동미륵반가사유상(1962-1)·금동미륵반가사유상(1962-2)·금동미륵반가사유상(1964)로 표기하게 된다.

종단·학계·단체 입장 상이

이 같은 동일명 표기에 대해 종단·학계·시민단체는 입장이 갈린다. 조계종의 경우 사찰 소재 국보·보물 문화재는 출처가 명확해 행정에는 큰 혼선이 없다는 입장이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종단은 사찰명 표기가 중요해서 박물관 등에 있는 동일명 문화재까지는 신경쓰지 못했다"면서 "보물의 경우 지정번호가 2000번대까지 가면서 새로 지정된 불교문화재가 후순위로 보이는 경향이 있어서 지정번호 폐지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학계는 반대 입장이다. 연구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원로 불교미술학자인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은 "지정번호는 그냥 순서일 뿐이다. 동일명 문화재에 지정번호 대신 지정년도를 붙여서 구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금동보살상만 해도 그 수가 적지 않다. 지정번호는 바로 구분이 되지만 지정년도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교과서, 안내판 등의 표기도 변경해야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도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소연 중앙승가대 문화재학과 교수는 "불교문화재의 경우 동일명 문화재들이 상당수다. 오랫동안 사용하며 정착한 제도를 하루아침에 없앨 경우 가져올 혼선은 적지 않을 것"이라며 "반가사유상 78·83호는 구분과 관리를 위한 표기였지 서열을 표기한 게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 시민단체는 지정번호 폐기는 찬성하지만, 동일명 표기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지정번호로 순서를 붙이는 것 자체가 일제 잔재다. 지정번호 폐기는 적극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동일명 문화재에 대한 지정년도 표기는 안일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보 제78·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의 경우 화관 모양이 다르다. 이 같은 특징을 부각시키는 명칭으로 문화재명을 달리하는 게 구분도 쉽고, 대중들의 이해도도 높아진다"면서 "현재 문화재 관련 학술용어들이 전반적으로 어렵다. 이를 쉽게 풀이하는 용어를 개발하고 문화재의 특징을 살리는 명칭으로 변경했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승려복지 성과 고무적 주거·의료 강화 '과제'

승려복지회, 11월 25일 토론회
최영신 교수, 10년 성과 진단
덕문스님, 재원마련 방안 모색

조계종 승려복지의 지난 10년 성과를 딛고, 향후 국민연금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과 주거보장 방안 모색, 스님 전용 요양시설 건립 등 의료보장 강화, 재원 마련방안 모색 등을 과제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조계종 승려복지회가 출범 1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승려복지 안착의 성과가 크다"고 평가한데 이어 분야별 과제를 짚었다.

최영신 중앙승가대 교수는 '종단 승려복지 10년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발제에서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등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국민연금 가입시 보험료지원 정책은 큰 성과지만, 2020년 12월 기준 전체 스님의 25.8%인 2963명만이 보험료지원을 신청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며 "신청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의 소개 및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특례가입 사업장 적용 검토, 기초연금제도 안내, 수행연금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모색 등 구체적인 방향성도 언급했다.

최 교수는 또 승려복지회의 운영체계 강화도 요청했다. 종단 조직의 강화는 물론, 승려복지 운영매뉴얼의 제작 보급, 통합관리정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중앙과 교구간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령자들이 익숙한 공간과 동네에서 자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의 개념을 승가공동체에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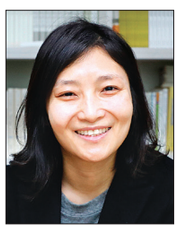
최 교수는 "고령자 스님을 위한 거주공간은 단순한 거처를 넘어 돌봄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며 "계단·문턱 제거, 욕실과 주방 개보수, 응급 비상벨과 안전손잡이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스님 전용 병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만큼, 향후 종단 차원에서 요양원 및 요양병원 건립을 통한 시설 확충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최 교수의 발제에 이어, 박재현 신대승네트워크 소장의 '승려복지에 대한 교구본사의 역할', 최효진 직지사 복지재단 과장의 '승려복지에 대한 교구본사의 역할',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의 '승려복지 재원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발제가 이어졌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기협 기자상 기획부문에 송지희 기자

'해외교구법 10주년' 기획
오는 12월6일 시상식 개최



한국불교기자협회(협회장 신성민, 이하 불기협)가 선정하는 2021한국불교기자상 기획해설부문에 본지 송지희 기자〈사진〉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이 선정됐다.

불기협은 11월 23일 2021년 한국불교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관규)를 열고 2021년 한국불교기자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기획해설 부문에 본지 송지희 기자의 '조계종 해외특별교구법 제정 10년'을 비롯해 대상에는 김내영 기자(법보신문)의 '가톨릭 순례길 사업에 대한 비판 보도 및 백지화 성과', 취재보도 부문에는 이성진 기자(불교신문)의 '조계종 승려복지회 공동 승보공양운동 보도'를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기획해설 부문과 취재보도 부문에서 다양한 출품작이 나왔으며,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며 "기획해설 부문에서 우수한 작품이 많이 나왔다. 취재보도부문에서는 이웃종교나 종단에 대한 강한 어조의 보도로 다소 우려가 됐지만, 취재 분석 등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였다"고 총평을 했다.

올해 한국불교기자상 심사는 김관규 동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 교수, 김시열 도서총판 운주사 대표가, 심사위원장은 김관규 교수가 맡았다. 시상식은 12월 6일 오후 5시 열릴 예정이다. 장소는 추후 공지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전쟁 육군병원 통도사, 현충시설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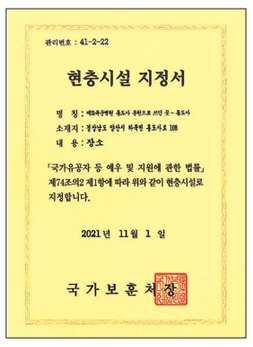
국가보훈처, 11월 1일
'현충시설 지정서 전달'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문)가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국가보훈처는 11월 1일 '현충시설 지정서'를 통도사에 전달했다.

통도사는 2019년 9월 경내 용화전 미륵불소조좌상의 복장유물 내용을 발견했다. 용화전 미륵존불 조성연기문에는 구하 스님이 작성한 내용 '경인년 6월 25일 사변 후 국군 상이병 3000여명이 입사해 불기2979 임진년 4월 12일 퇴거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후 통도사는 유가족 및 한국전쟁 당시 통도사에 입원한 생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등 객관적 자료 취합하여 국방부를 비롯해 국가보훈처, 울산보훈지청 등 관련 기관에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했다.

울산보훈지청은 "'영축총림 통도사 제31육군병원' 현충시설 지정(통기 제2021-227(2021.5.4.)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 2021년 제4회 현충시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현충시설로 지정되었음을 알린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관리번호 : 41-2-22

현충시설 지정서

명 칭 : 영축총림 통도사 용화전 미륵 존불 좌상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내 용 : 장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충시설로 지정합니다.

2021 년 11 월 1 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보훈처에서 전달한 '현충시설 지정서'.

통도사 기획국장 광우 스님은 "통도사의 현충시설 지정은 국난 속에 활동한 호국불교의 역사를 밝힌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현충시설 지정을 시작으로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위령재를 봉행하는 등 호국도량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최대 화엄법석인 통도사 화엄산림대법회가 12월 4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설법전에서 열린다.

입재법문은 오전 10시 불공에 이어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으로 진행되며 이후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과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통도사 강주 인해 스님 등 30명의 국내 화엄법사의 법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축 복합문화공간 KUmuda 명상문화센터 개관

불자님들의 원력과 정성이 모여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쉬어 가는
풍성한 문화예술의 도량 KUmuda 명상문화센터 건립 불사를 원만 회향하였습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벽산 원행 큰스님**을 증명법사로 모시고
여법한 회향의 법석을 마련하여 사부대중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 주지 ·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합장

KUmuda 명상문화센터

Opening Ceremony

12 09

점심 공양은 낮12시부터 1시 30분까지 명상센터 3,4,5층에 준비되어 있으며
주차는 쿠무다명상문화센터와 라온호텔 주차장을 이용 바랍니다.

KUmuda 명상문화센터 개관식

일시_ 2565(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오후 2시
장소_ KUmuda 명상문화센터

KUmuda
문화를 넘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곳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41 전화 051)702-1300